

## 성신여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2번

- ☞ 제시문 <다>에 소개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에 비추어 제시문 <가>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수집 및 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시오. 그리고 아래 일어난 세 개의 사례를 고려하여 제시문 <다>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800~1,000자)

### <사례>

-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 남성이 서울의 성소수자 거리에 있는 클럽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오에 따라, 인권 단체들은 그 남성과 접촉한 사람들의 성 정체성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됨에 따라 해당 식당과 영화관은 최소 2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영업을 재개된 이후에도 확진자 방문 이전과 비교할 때 매출의 60%가 감소하였다.
- 중고교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바이러스 감염 또는 전파로 인해 친구들에게 따돌림이나 망신을 당하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고 한다.

<가>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인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야기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강행한 봉쇄조치 없이도 감염병 전파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감염예방 물품과 생필품의 매점매석, 사재기가 횡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는 마스크를 사거나, 투표를 할 때뿐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세 가지 비결인 ‘검사’, ‘추적’, ‘억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중순에 전 세계를 향해 ‘검사, 검사, 검사’를 애타게 주문하기 몇 주 전부터 한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12,000명을 검사할 능력을 갖추었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와 워크인(walk-in) 등의 방식을 통해 10분 안에 무료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24시간 안에 피검사자의 휴대전화로 전달되었다.

한국이 감염병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올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검사는 물론이고 접촉자를 추적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모바일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최근 동선을 밝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휴대폰 GPS 추적, 감시 카메라 기록,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보조수단으로 동원하였다. 이토록 세밀한 추적 덕분에 한국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가 확진 판정 전에 다녔던 곳을 대중에게 낱알이 실시간으로 경고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고 안내문에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방문했던 장소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인권이지만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사생활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견고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건강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임의적 결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5월에 발행한 보고서 『코로나19 억제 정책: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국의 ICT 활용 사례』를 보면,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검사, 재빠른 추적, 원활한 치료를 통해 “20일 만에 성공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증가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결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다>

정보화는 우리의 삶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개인의 정보가 정보화 기기를 통해 노출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악용되는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체와 의료 정보 등을 수집, 저장, 관리하면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는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미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신고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일찍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으며, OECD 이사회는 2013년 7월 11일 이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각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해 왔다. 국내에서 ‘OECD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으로 많이 알려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원칙	상세 설명
1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정보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 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 참여의 원칙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 제시문 <다>에 소개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에 비추어 제시문 <가>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수집 및 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시오. 그리고 아래 일어난 세 개의 사례를 고려하여 제시문 <다>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800 ~ 1,000자)

[독해]

(가) 한국 정부의 방역 활동 중

- 1)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부분
- 2)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한 부분

(다) 사생활 보호 8대 원칙 중

- 1) 수집 제한의 원칙: 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한 이후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2) 사용 제한의 원칙: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사례] 확진자 정보 공개 →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발생

[논리평면] 가치추론, 견해(대안)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다)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G
대상	(가)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강제로 수집했다	b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G
대상	(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g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사례〉	사생활 침해에 따른 피해 구제 필요	정당성 강화
		확진자 정보 공개 → 정신적 물질적 피해 발생	부당함
대상	(다)	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원칙 추가	정당성 강화

[예시답안] 859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핵심	정보화 시대에 점점 심각해져 가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기준-상술1	그 중 첫 번째 원칙인 수집 제한의 원칙은 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해야만 정보를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원칙이고,
	기준-상술2	네 번째 원칙인 사용 제한의 원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	주장	이러한 원칙에 의해 한국 정부의 방역 활동은 양면적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대상 1	먼저 제시문 (가)에 나타나듯이 한국 정부는 시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용카드, GPS 등을 추적하여 이동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다. 감염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이 머물던 장소를 불특정다수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적용 1	이는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첫 번째 원칙인 수집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는 대목이다. 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도 강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대상 2	반면 정부는 이러한 정보 분석 활동을 모두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했다.
	적용 2	이는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의 사용 제한의 원칙을 준수한 대목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했기 때문이다.
3	기준-핵심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준-상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들 및 그와 접촉한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공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4	주장	따라서 사생활 보호 원칙에 피해 구제 원칙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	현재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정보 수집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어떤 보상의 책임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적용	따라서 사생활 보호 원칙에 피해 구제책이 추가된다면 이를 채택한 국가들의 정보 수집에 정당성을 유의미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올해 인문계열 모의 논술 고사는 지난 3년간의 출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통합 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경제>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의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이번 논술 고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과 사생활 보호’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응시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사생활 보호의 원칙에 더 깊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제시문 <다>의 OECD 원칙에 비추어 한국의 사례를 평가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실제 사례를 감안하여 그 원칙을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원리적 사고에 기초한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문제 1]과 [문제2]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 [대학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는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에서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한 기사, 그리고 해외에 배포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독일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제시문은 한국어 ‘검사’, ‘추적’, ‘억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던 데는 잘 갖춰진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큰 역할을 했음을 상세한 사례와 함께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문제 1, 2와 연관된 주제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GPS와 신용카드 거래 내역 추적, 확진자 방문 장소 공개 등은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수험생은 제시문으로부터 첫째, 소개된 한국 정부의 조치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사생활 보호에 위협이 되는지, 둘째, 그러한 위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만큼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사생활 침해의 허용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 사회>와 OECD에서 2013년에 발간한 <The OECD Privacy Framework>에서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편집·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정보화가 인간의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보화 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도용 및 사생활 침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 제시된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예상되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온 사생활 침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제시문 <다>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이에 관한 개정안인 ‘OECD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은 사생활 침해에 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8대 원칙이란 수집 제한의 원칙, 정보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사용 제한의 원칙, 보안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여의 원칙, 책임의 원칙으로 제시문에는 각각에 대한 상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문제 풀이와 특히 관련되는 부분은 이 8대 원칙이다. [문제 2]에서 8대 원칙을 통해 평가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 과정이므로 정부 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사용 목적, 개인정보 사용, 개인정보 보안 등의 세부 활동을 제시문 <가>에서 최대한 찾아내고 그것들을 8개 원칙

각각에 배정하여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학 문항해설]

본 문제는 제시문 <다>에 제시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을 서술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문 <가>에 나타난 감염병 확진자 정보 공개에 관한 한국 정부 정책이 적절한지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사생활 보호 8대 원칙 중 ‘수집 제한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며, 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확진자 정보를 수집해 온 한국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가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 또 ‘사용 제한의 원칙’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일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견고한 법률 체계를 갖춘 한국 정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확진자 정보 공개는 적절했다고 평가하기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통해 제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 사고력 및 근거 제시 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력, 표현력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다>에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의 주요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시문 <다>의 내용 이해는 결국 제시문 <가>에 기술된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덟 가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한국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일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일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인정보 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한다면 사생활 보호는 존중받아야 할 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양측의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제시문 <다>로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찾아 제시문 <가>를 평가하는 데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이름과 주소까지 수집, 공개한 것은 8대 원칙 중 두 번째인 ‘정보 정확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적절성 판단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과연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에 제시된 세 가지 사례에 비추어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의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의 내용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확진자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원치 않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성 정체성이 원치 않게 공개된다거나,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다녀간 곳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매출이 급락하고, 학교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는 공개되어도 무방한가?’ 그리고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심적, 물질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쟁점을 토대로 제시문 <다>에 제시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창의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해 구제의 원칙’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도록 한다.

[대학 채점기준]

문항	배점	세부 내용
문제2	10	제시문 <다>에 기술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정리하였는가?
	20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공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15	문제에 주어진 세 가지 사례가 내포하는 쟁점에 비추어 제시문 <다>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하였는가?

2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시문 <다>에 기술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정리하기

둘째,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수집 및 공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셋째, 문제에 주어진 세 가지 사례가 내포하는 쟁점에 비추어 제시문 <다>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1) 첫째 부분

- 제시문 <다>에 드러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제시문 <가>를 평가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선별·정리하였는지를 점검한다.
- 응시자가 해당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2) 둘째 부분

- 제시문 <가>에 서술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수집 및 공개 과정 가운데 제시문 <다>의 8대 원칙과 짝지어 평가할 만한 요소들을 상세히 발굴하여 제시하였는지 점검한다.
- 서술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수집 및 공개의 세부 내용이 8대 원칙 중 구체적으로 어느 원칙과 관련되는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련성은 적절한지 점검한다.
- 관련된 원칙에 비추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루어진 수험생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적절하고 논리적 인지 점검한다.

3) 셋째 부분

- [문제 2]에 제시된 세 가지 사례가 어떤 점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사생활 보호라는 이슈와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점검한다.

- 세 가지 사례로부터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의도치 않게 발생한 부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보완되어야 할 점을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지 점검한다.